

# 선거철 다가오니... 불법 주차·노점 단속 손놓은 지자체

### 표심에 악영향 줄까 머뭇... 일부는 시민이 신고해도 출동안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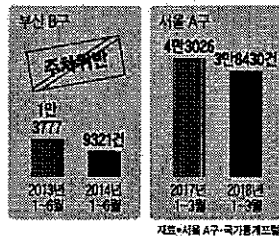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경범죄 단속을 주저하고 있다. 불법 주차·노점 신고를 해도 출동하지 않는다. "표심(票心)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구청·군청의 '단속 인심' 이후해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법에 따라 행정을 해야 하는 지자체가 선거 때문에 불법에 눈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불법 노점·주차 '선거철엔 단속 못해'  
지난달 31일 오후 경복궁역 3번 출구 앞에서 경찰이 효자동 방향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다. 길가에 불법 주차 차량이 30~40대쯤 세워져 있었지만, 아무런 단속이 없었다. 주정차가 금지된 버스정류장에도 '바스'라 적힌 구역을 침범해 세워둔 승용차가 많았다.

주민 박모(54)씨는 "작년까지만 해도 주차금지 구역의 차량은 곧바로 견인했는데, 요즘은 방치해둔다"며 "민원을 넣어도 단속하는 시늉만 한다. 선거철마다 그랬다"고 했다. 한 경찰관은 "참다못한 주민이 경찰에 전화를 건다. 우리도 힘들다"고 했다.

불법 노점상들 사이에선 "선거철엔 단속 우려 없이 장사를 하는 기간"으로 통한다. 지자체의 '눈감아주기' 때문이다. 1일 오후 3시쯤 서울 홍인지문 인근에선 불법 천막 노점 40여 개가 인도 한쪽을 점거하고 장사 중이었다. 행인들은 어구간을 지날 때 앞 사람과 어깨를 자주 부딪쳤다. 한 과일상(58)은 "단속이 심할 때는 '노점 크기를 좁히라'며 물건을 가져가기도 하지만, 선거철에는 이런 단속이 심하지 않은 편"이라고 했다. 한 의류

지방선거 전후 불법주차 단속 건수  
■ 지방선거가 열린 해



### "선거철엔 단속 걱정없고 장사" 불법 노점상들 인도까지 점거

상(43)은 "노점상들 사이에서 '단속이 심해지면 다른 사람을 구경장으로 뽑자'는 이야기가 금방 퍼진다. 모든 노점상이 이 지역 주민은 아니지만, 선거하는 사람

은 그 말을 무시하기 힘들다"고 했다. ◇구청·경찰 갈등 빚기도

불법 노점상 단속은 주로 구청 건설관리과가 맡는다. 불법 주차차의 경우 경찰과 구청이 함께 처리하지만, 주로 경찰이 한다. 경찰은 순찰과 긴급 출동, 구청은 주민들의 생활권 관리가 주 업무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경찰에 접수된 불법 주차는 운전자가 현장에 있어야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운전자가 없으면 담당이 구청으로 바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의 단속이 느슨해지자, 주민들이 경찰에 단속해달라고 신고한다. 이 때문에 구청과 경찰이 갈등을 빚는 일도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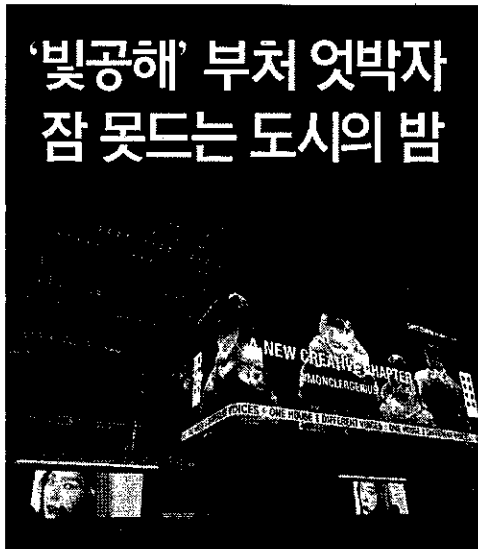
최근 서울 종로구의 한 파출소에는 "인근 주말농장에서 불을 피운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불법 취사에 대한 신고로, 구청 소관이다. 신고가 계속 들어와 경찰이 일단 출동했지만, 주말농장 주민

을 방해 혐의로 체포하지 않는 이상 단속할 권한이 없었다. 한 파출소 관계자는 "구청의 대응이 늦어 경찰만 단처한 상황"이라며 "요즘 주민들 불만이 경찰에 쏟아진다"고 했다.

구청들은 "선거철이라고 해서 단속을 줄이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숫자가 보여주는 사실은 차이가 있다. 작년 동기(2~3월) 대비 서울 A구청의 올해 불법주차 단속 건수는 3만3376건에서 2만4114건으로 28% 줄었다. 부산 B구는 2013년 상반기(1~6월) 1만3777건이던 불법주차 단속 건수가 지방선거를 치른 2014년에는 9321건으로 32.3% 줄었다. 올해 같은 기간에는 1만1876건으로 다시 27.4% 증가했다. 선거가 끝나면 다시 단속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거둬들인 과태료는 전액 구청·군청 예산으로 들어간다.

박상현·구분우·원우식 기자

## 세계일보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일대가 전광판에서 쏟아져 나온 강렬한 빛으로 밤중인데도 대낮처럼 환합니다.

### 방지방 새명 5년- 서울지역 민원 되래 2.7배 늘어

문규성 기자 ks@segye.com

지난달 30일 밤 서울 강남구 코엑스 부근,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도 대낮처럼 환했다. 최근 코엑스 외벽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이 내방을 강렬한 빛 때문이다. 정부는 코엑스 일대를 '한국판 타임스퀘어'로 만들겠다고 전광판 설치를 추진했다. 가로 22m, 세로 82m 크기로 남구장면적 4배에 달하는 대형 전광판을 비롯해 3개나 설치됐다. 여기에 연방까지 5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도심 곳곳에 설치된 전광판과 옥외 광고물, 가로등 등의 인공조명으로 '빛공해'를 호소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 정부는 빛공해를 줄이겠다고 2013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까지 만들어 시행했지만 부처 잇박과 실효는 낮은 규제 탓에 빛공해 민원은 되레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빛공해방지법이 실효를 거두려면 적용 대상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코엑스 일대는 '옥외광고물 자유시시지역'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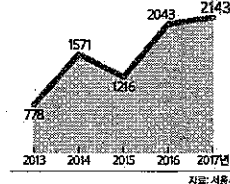
코엑스 일대 옥외광고 규제 풀려 남구장 4메 크기 전광판 '번쩍' "시선 빼앗겨차량 사고 등 우려" 주택가 허용기준 선전국 3배 등 법랑 '슬방방'이 단속 차벽 쉽잖아 "적용대상·기준 강화 필요 높아야"

지정돼 규모나 형식의 구제를 받지 않고 전광판 광고를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전광판을 빛공해의 주된 원인으로 봐 규제를 왔는데 틀린 코엑스 일대만 예외를 허용한 것이다.

코엑스 전광판을 본 시민 반응은 엇갈린다. 관광객 김모(20)씨는 "전광판이 화려해 눈길을 사로잡는다"며 "거대한 화면으로 K팝 영상을 보니 공연장이 온 기분"이라고 말했다. 반면 인근 직장인 다니는 임모(32)씨는 "번쩍이는 영상 때문에 주변을 지날 때마다 정신 집중이 안 된다"며 "영동대로를 지나는 차량이 많은데 주의해야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2018년 04월 02일 월요일 011면 사회

서울시 '빛공해' 관련 민원 현황 (단위: 건)



행안부는 코엑스 전광판을 빛공해방지법에서 정한 빛방사 허용기준에 따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빛공해를 막기에 빛방사 허용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코엑스 전광판은 빛방사 허용기준에 따라 허가된 뒤부터 지정까지 1500cd(칸델라)/㎡의 밝기로 운영된다. 사중엔 판매되는 올레드(OLED) 스마트폰 갤럭시S8의 최대 밝기보다 1.5배나 더 높다. 더욱이 전광판은 빛방사 허용기준을 측정할 때 지체방광 밝기인 휘도(cd/m)를 사용하는데 주변을 지나는 보행자나 차량에서 느끼는 밝기인 조도(lx·룩스)는 채감상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주택가에 적용되는 빛방사 허용기

준은 선전국보다 3배 이상 높다. 국내에서는 주택가로 들어오는 인공조명 밝기가 10lx를 넘으면 빛공해로 보지만 미국과 독일은 각각 3lx, 1lx 이하로 규제한다. 여차될 기준치가 높다 보니 빛공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내기도 어렵다. 지난해 광주가 캠프인스펠트 인근 아파트 주민 65명은 "아구 정에서 발생하는 빛과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잠을 수 있는 한도를 넘진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환경부가 정한 '발광다이오드 LED' '시각적 불편감'을 주는 눈부심 정도) 36을 넘지 않았다는 것이다.

빛공해에 대한 규제나 손해배상 위한 기준이 관대하다고 보니 관련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빛공해 민원은 2143건으로 빛공해방지법이 시행된 2013년의 778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이은일 고려대 교수(예방의학과)는 "우리나라의 빛방사 허용기준은 선진국과 비교해 기준치가 너무 높다"며 "조광관리규역을 설정하고 기준치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